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 4. 18.(목) / 총 12매(본문 7, 참고 5)
담당부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혁신지원팀	담 당 자 • 팀장 이지혜, 사무관 조관우(☎02-397-5505, 5518)
	건축문화경관과	담 당 자 • 과장 이경석, 사무관 방대혁(☎044-201-3775, 3778)
	건축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남영우, 사무관 한동균(☎044-201-3755, 3758)
보 도 일 시		2019년 4월 18일(목) 11: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목) 석간 가능〕

공공건축물에 디자인과 품격 입혀 삶의 질 높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

- ❖ **[민간 전문성 활용] 도시재생뉴딜사업 공공건축가 지정 의무화**
- ❖ **[설계비 아닌 설계품질로] 소규모 생활SOC 디자인 설계 절차 개선**
- ❖ **[설계공모 대상 확대] 공사규모 50억 이상→23억 이상으로 확대**
- ❖ **[부처 협업]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교육부), 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문화체육 생활SOC(문체부) 등 5대 시범사업 추진**

□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SOC**도 디자인 보강을 위해 건축계획 사전검토*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적용한다.

* 발주기관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작성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건축도시공간연구소內 설치)가 사전검토하는 제도

○ 설계품질로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으로 확대**되고, **1억 원 미만도 디자인 평가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4월 18일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 매년 5천 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그 동안 **개발시대 양적 성장** 과정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 **공공건축물**은 일반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주요 생활SOC**로서 전국 약 21만동 산재('18년말 기준)

** '18년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38.8%가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이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그중 절반 이상이 획일적인 디자인을 지적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아름다운 외관**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사용이 편리**하도록 건립할 계획이다.

□ 이번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 그간 공공건축은 건축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부처 또는 일선 지자체의 **여러 부서***가 소관 시설별로 사업을 **각각 추진**해 왔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이 조화롭지 못하고 시설 **상호간 기능도 연계가 부족**해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하였다.

* 어린이집(어린이청소년 부서), 복지관(복지부서), 도서관(문화부서) 등

○ (미흡예시) 회계부서(주민센터)와 문화부서(문화센터)가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 추진 ⇨ 각 시설이 동떨어진 위치에 건립되어 주민 이동불편 등 민원발생

○ (우수예시) 문화부서(도서관)와 교육부서(학교)가 총괄건축가를 통해 협의를 진행 ⇨ 각 시설의 담장을 허물고 사이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만족도 상승

- 이에,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총괄건축가) 지역 전체 관점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정책·방안 등 자문 수행
(공공건축가) 개별 사업별 설계지침 작성 자문, 설계 관련 심사 등 수행

-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건축 선진국에서는 18세기 말부터 도입·운영중

○ 특히, 서울시·영주시 등에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자발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한 사례를 참고하여,

- 민간전문가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 '19년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7개소 추진 예정(5월중 선정 예정)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서울시 공공건축 조성 사례]

			
구산동 도서관마을	**금호 초등학교**	**다락옥수**	**창4동 어린이집**
기존 주택 리모델링과 신축의 조화,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조성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도하고, 참여형 수업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새로운 교실 공간 모델	방치된 고가 하부 공간을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회복하고, 경관 및 환경 개선에 기여	내외부 공간의 연계 등을 통해 전체가 놀이터이면서 체험학습 장소로 조성하여 아이들의 창의력 제고

-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할 계획이다.

* 사업부서 간 업무 조정 등에 필요한 권한 부여, 지원조직 설치 등 업무환경 조성

○ 또한 여건상 당장 민간전문가 활용이 어렵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기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내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 등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주고, **조달청**은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공모 업무를 대행** 지원 등

【 좋은 설계자를 뽑아 제대로 짓겠습니다. 】

○ 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실제 주민들이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주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격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부실설계 논란이 있어왔다.

- 이에,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설계품질로 경쟁**해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동네 풍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설계공모**를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 설계공모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단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비전문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 **노후 공공건축물**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공공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을 우선 수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 '18년 기준 전체 23.8%(약 5만동) 수준으로, '25년에는 40%까지 증가 전망

- 또한, 신축 공공건축물과 함께 노후 건축물도 리모델링 전에 디자인 개선 등을 포함한 **건축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 (미흡사례) ◯◯시는 약 1,0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이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유사 규모의 공연장을 1.5km 거리 내에 추가 신축

《 영주시 공공건축 조성계획 수립사례 》

○ 총괄건축가 임명('09) 후 역사문화거리, 삼각지, 舊역세권 등 5개 거점공간을 지정하고, 거점공간별 노후시설 활용 등 개선방향 제시

– 동 계획에 따라 지난 10년간 리모델링, 신축, 도시재생 등을 지속 추진중



청소년 비보잉 연습장
버려지고 노후화된 의회 창고건물을 리모델링 (역사문화거리)



노인복지관
철도로 고립된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신축 (삼각지)



후생시장
쇠퇴된 근대상업가로를 지역명물로 도시재생 (舊역세권)

【 국민의 디자인 개선 체감도를 '확' 높이겠습니다. 】

○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먼저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사업특성에 맞게 **사업 시행지침** 등에 담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개발사업별로 공공건축가 의무 위촉, 지역개발사업 내 개별 건축물 설계는 하청 없이 별도발주, 설계비 1억 미만도 디자인 능력을 고려한 입찰방식 적용

○ (미흡사례1) ◯◯시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내 포함된 개별 건축물 설계가 전체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일괄 포함되면서, 용역을 수주한 엔지니어링 업체가 자의적으로 하도급을 진행함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디자인 수준 낙후

○ (미흡사례2) ◯◯시 ◯◯사업 등: 아이디어 제시 수준의 지자체 사업신청서를 기본계획으로 갈음하면서 디자인 발전단계 없이 바로 가격입찰로 실시설계 발주

- 또한 향후에 이러한 디자인 개선 절차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 시범사업으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5개 부처사업*을 선정**해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협업체를 구성**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디자인 관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모든 사업지에 **공공건축가 위촉**을 지난 4월 15일에 **의무화**하였으며, 작년부터 지역특화 유형으로 실시 중인 건축·경관특화형 뉴딜사업*을 건축디자인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건축·경관 전문가가 사업 전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경관요소 등을 활용한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18년 3곳, '19년 2곳 旣 선정)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그간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이제는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하여 그 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보석처럼 박히게 되면 국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방대혁 사무관(☎ 044-201-37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기본전략

전략	목표	세부과제
공공건축 디자인 총괄기획·조정을 위한 발주기관 역량 강화	도시 전체 통합적 관점에서 공공건축물(신축 및 기존건축 포함) 디자인 개선 추진체계 구축	· **총괄·공공건축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발주기관 역량 보완**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사업 절차 개선	좋은 설계자 선정으로 설계의도 변질없이 높은 설계품질 확보 시스템 구축	· **사업단계별 디자인 절차 혁신**(신축 및 기존 노후건축물)
		· **소형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개선 정책 확대
현장 실행력 제고	디자인 개선절차가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내실있게 추진	· 공공건축 **협업·지원체계 마련**
		· **5개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성공사례화** 추진

참고 2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 공공건축 디자인 총괄기획·조정을 위한 발주기관 역량 강화 】

❖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가 기존 조직 내에서 **각 부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

❖ **전문성이 낮은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건축사업 시행 단계별 **지원 정책 강화**로 디자인 개선 **역량 보완**

1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총괄·공공건축가**가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조직 설치 등 **적정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19.10)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

○ (**제도개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건축행정 관련 조정·자문·기획 등을 수행하도록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를 위촉

* (근거법령)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업무내용**

- (**총괄건축가**) **지역 내** 각종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일관된 디자인 방향 제시, 주요 도시계획시설의 건축계획·발주방식 자문, 건축·도시 정책 자문
- (**공공건축가**) **개별 프로젝트**의 설계공모지침·설계기준 작성 자문, 공공건축 설계 관련 각종 심의 참여 등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전국 총괄건축가 협의회』**(5월중 1차 예정)를 구성하여 전국단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 사업담당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확대*

* '18년 17개 기관(857명) → '19년 20개 기관(1,000명) 연중 교육 실시 예정

○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산**을 위해, 발주기관이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가풀 DB**를 구축하고,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19.5)

2 발주기관의 역량 보완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內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중인 **건축계획 검토***의 신속한 진행과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 교육·주택 등 **관련 전문기관**(에듀맥, LH연구원 등)과의 **협업체계** 마련('19.12)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의 디자인 방향·지역특성 반영여부·주민 참여방식 등을 설계발주 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해주는 제도

-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청**이 수행중인 **설계공모** 업무도 공모대상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제출도서를 간소화**하고 **심사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19.12)

* (現) 채점제 심사 → 토론 도입 및 채점제·투표제 등 다양화

○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디자인 개선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사업 주무부처**의 **디자인 관리책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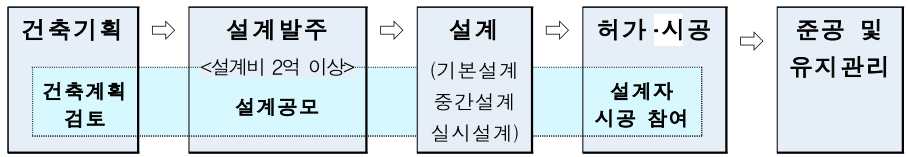
*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등

【 좋은 설계자와 높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사업절차 개선 】

❖ **노후시설 활용** 등 포함, **좋은 설계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설계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단계별 **설계업무 절차 혁신**

❖ **소형 공공건축물**(설계비 1억 미만)도 **디자인 개선 절차 마련**

[현행 공공건축물 사업 절차]



1 사업단계별 설계업무 절차 혁신(신축+기존 노후건축물)

○ (조성계획 수립) 각 발주기관이 개별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노후 기존시설의 활용과 시설간 기능 연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건축 조성계획」** 수립 유도

* 금년에 기초지자체 공모로 5개소에 시범사업 실시(5월 선정예정)

○ (건축기획 단계) 신축 공공건축물과 함께 노후학교,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건축물**도 **리모델링 전**에 디자인 개선 등에 대한 **건축계획 수립 의무화**('19.12)

- 아울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등 중요한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절차** 마련

○ (설계발주 단계) 현행 **건축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자**는 심사위원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19.4)

* (現)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위촉 가능 → (향후) 건축설계 등 분야 자격 충족 필요

- 특히, **응모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아이디어로 경쟁**하는 **제안공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부절차 마련**('19.12)

* 상세도면 대신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은 이미지·다이어그램 등으로 평가하는 공모방식

○ (건축허가 단계) **지자체**가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 할 **건축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규정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을 금지**토록 제도 개선('19.12)

- 또한, 심의자 주관에 따른 심의, 심의대상 임의조정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의대상 등 명확화**하고,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등 **유사 심의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심의 간소화**

○ (시공 단계) 시공 용이성, 공사비 절감 등 사유로 **설계안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 세부기준** 마련('19.12)

2 소형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정책 확대

○ 전체 공공건축물의 90%인 **소형 공공건축물**(설계비 1억원 미만)도 설계품질 대신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설계공모 대상을 확대***하는 등 디자인 개선절차 마련

* 설계비 2 → 1억원 이상으로 확대('20.1~)하고, 1억원 미만은 간이공모 등 도입

【 부처 지역개발·생활SOC사업의 현장 실행력 제고 】

❖ 디자인 개선절차가 **사업현장**까지 제대로 **적용**되도록 **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 필요
❖ **5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1 공공건축 협업·지원체계 마련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조달청 등 각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 중인 **설계공모 제도**의 **주요 원칙을 통합**하여 **혼선을 최소화**('19.12)

○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자체 자체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19.10)

* ① 지역개발사업별 공공건축가 의무 위촉, ② 지역개발사업 내 개별 건축물은 하청없이 별도 설계발주, ③ 설계비 1억 미만도 디자인 능력을 고려한 입찰방식 적용

- **사업별 시행지침**이나 **관계법령 개정**으로 업무기준 준수 추진

○ 지속적 실행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법령에 혼재된 **디자인 개선 절차를 체계화**하는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19.下 발의 예정)

2 5개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높고 상징성이 큰 **5개 부처의 사업***을 선정하여, **성공사례화** 추진

*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부처간에 **「공공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전 과정에 **디자인 개선 지속 수행**